

일회성 이었나...시들해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5년 말 뿐인 친환경 정책...자율 맡겼더니 광주·전남 지자체들 외면
불황·소상공인 부담에 전국 2곳만 시범 실시...환경단체 전국 확대 촉구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의무가 아니다"는 등 이유로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 22개 시군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낸 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컵 사용 및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 낭비 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해법으로, 지난 2020년 자원

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됐다.
시행 대상 사업장은 가맹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판매점·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으로,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전남에는 매장 2000여 곳이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법령상 개정안 공포 2년 뒤인 2022년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돼야 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도 시범 운영 지역인 제주, 세종을 제외하고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과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전국 시행을 두 차례 유예한 끝에 지난 2023년 아예 전국 확대 시행 방침을 철회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

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기초는 유지하되,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려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환경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소상공인들이 싫어해서 도입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번거로운 보증금 환불 과정, 무인회수기 설치 금액 등 운영 부담에 업체들이 더 꺼려한다며 제도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제도를 강행했을 때 지자체의 예산 부담 뿐만 아니라 업주와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니 아직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도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매장과 공공장소에 충분한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고

정결 유지를 위한 관리 인력 등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럴 예산이 없다"며 "소비자와 참여 업체의 불만·민원 해소를 위한 충분한 홍보와 중장년층의 이용을 돕기 위한 반환 도우미 인력 채용 등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화순군과 담양군 등은 2~3년여 전부터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역 업체들과 논의를 추진했으나, 업체 측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해남군의 경우 보증금제와 관련해 제주도로 출장 견학까지 갔음에도, 해남군 내 제도를 적용할 만한 매장이 많지 않다는 등 이유로 시행을 보류했다.
여주시, 고령군, 함평군, 무안군 등은 아예 제도 도입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 환경 단체들은 "정부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일정을 법에 명시하고, 가맹

점 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며, 선도 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00여개 단체와 시민 1233명은 지난달 31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법안 개정 촉구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진아 목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됐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은 환경부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며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국제플라스틱협약 제 5차 회의의 중간회의가 열린다. 이 시기에 맞춰 국내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관광 여수, 이번엔 '밧상 숙박업소'

투숙객 "호텔서 수건 대신 걸레 제공"...식당 이어 이미지 먹칠

전남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여수가 최근 불친절·불량 서비스를 제공한 식당과 숙박업소 등으로 '밧상'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어 지역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텔 투숙객이 수건 대신 걸레를 제공받고 1인 손님이 '밧집'으로 소개된 식당에서 2인분 값을 내고도 '빨리 드시라'며 호통을 듣는 등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는 여수시 돌산읍 A리조트에서 "수건 대신 걸레를 받아 몸을 닦았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게시글 내 투숙객은 "호텔 수건을 사용한 후 수건에 적힌 글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검정 글씨로 '걸레'라고 쓰여 있었다"며 "수건으로 아이들 몸을 닦아 준 후였다. 엄마로서 그 순간 정말 최악이었다"고 썼다.
글에는 "호텔 측에 문의하자 '분리세탁은 하는데 섞인 것 같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상식적인 조치를 기다렸는데 수건 교체, 그것조차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숙박업소는 1박 요금에 4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업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숙박업소 측은 지난달 29일 SNS에 글을 올려 사건 발생 사실을 시인했으며, "수건 및 침구류 관리, 객실 점검 시스템, 응대 매뉴얼까지 전면 재정비를 진행 중이다. 모든 과정을 책임 있게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에는 여행 유튜브 채널 '유난히 오늘'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밧집으로 알려진 여수시 교동 B식당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유튜버가 손님이 적은 오전 10시 40분께 식당을 방문해 2인분 메뉴를 주문했는데, 1~2분여만에 '빨리 먹으라'며 식당 업주가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유튜버는 "체할 것 같다"며 음식을 남겨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은 15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터넷 등으로 퍼날라졌다.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져나가자 여수시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여수시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또 식당을 방문해 친절 교육과 함께 특별위생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침수 예방 교육책...홍수방어벽에 배수 구멍 5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서방천 일대 홍수방어벽에 작업자들이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 구멍을 뚫고 있다. 왼쪽 위가 배수 구멍.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분양사기 피해자 220여명 하루하루 힘든데 '고운라피네 사건' 수사 8개월 넘게 지지부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 사기 사건인 '고운라피네 사건'과 관련, 경찰이 8개월 넘게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분양 피해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220여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60여억원에 달하는 사건인데다, 최근 피해자 일부가 민간임대주택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까지 나올 정도인데도, 정작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는 실정이다.
광주동부경찰은 5일 "고운라피네 시행사, 업무 대행사, 용역사 등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

에 이르렀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보장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시행사 대표 A씨(구속)를 비롯해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분양대행사 대표 등 총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아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 왔다.
고소·고발장에는 시행사와 용역사 등이 조합원 모집 2년이 넘도록 관할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는데 전세보증보험(HUG) 가입도 못 하고 1000만~3000만원의 계약금 환불 요구조

차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 시점은 아직 안갯속이다. 경찰은 더딘 수사를 검찰과의 의견 차이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는데, 검찰 측이 보완 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합 자금이 무등산 시행 사업 손실 보전, 사무실 운영비, 계약 인센티브 등에 쓰였다는 점에서, 시행사 등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려 했으므로 사기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장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체면 상태다. 실질적으로 남은 사업 자금도 없어 회수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와 피해자가 많은 만큼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히 수사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광주 고교 체육과 지도진·교직원 횡령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광주 모 고교 체육과 지도진과 전·현직 교직원들의 학교 예산 부당 집행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29일 A고 전·현직 체육부 코치와 교감, 교장 등 7명을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체육부 지도자들과 당시 결재권자인 교감, 책임자인 교장이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

수 경비 명목으로 학교 예산을 부당 집행했다"며 "숙박비, 식대 등의 실비를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뒤, 학교 예산으로 이중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국체전 특정 선발 선수 출전비(숙박비, 식대, 간식대)의 경우, 광주시체육회가 협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며, 보조금을 초과한 경비는 협회 자체 예산을 투입해 메우고 있는데 이유없이 학교 예산을 썼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